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vs “과세 인프라 부족… 유예 필요”

〈정부〉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② 소득과세 갑론을박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연간 최대 250만원 소득 면세

가상자산업계, 시기상조 지적
“산업 경쟁력 약화될 수 있어”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세 인프라 부족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행 유예나 법안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유예없이 과세 방침

과세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뤘었는데, 이미 세 차례의 유예가 있었던 만큼 추가 유예 없이 과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세는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의 22%(20%+지방세 2%)를 과세하며, 소득 산정 시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을 공제한다. 또한 연간 최대 25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놓았다. 지금 과세를 시작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85%는 5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공제액이 250만원인 만큼, 투자자 대부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과세 본격화… 시점·기준 상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했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시점, 과세 기준 소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를 시행 중이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 포함해 소득 구간에 따라 10~37%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0~23.8%(고소득자 대상 순투자소득세 3.8% 포함)의 장기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단, 소액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다만 일본 내에서 과도한 세율이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최근에는 일본 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한해 세율 상한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현황〉

국가	가상자산의 성격	취득	양도차익	세율
미국	자산	개인소득세	통상소득/자본이득 (종합과세/분류과세)	·1년 미만 단기보유시 소득에 따라 10~37% 과세 ·1년 이상 장기보유시 0%(4만 달러 이하), 15%(4만달러 이상 44만 1,450달러 이하), 20%(44만 1,450달러 초과) 과세
영국	자산	개인소득세	자본이득 (분류과세)	·기본세율 범위 10% ·기본세율초과 범위 20%
독일	자산	개인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일본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지불수단	잡소득세	잡소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15~55%(주민세 포함) 과세
호주	자산	개인소득세	자본이득 (종합과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0~45% 과세
싱가포르	자산	개인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자본시장연구원

과세 시행을 앞뒀다.

영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의 매도나 교환, 사용이 발생하면 취득 시점의 가격과 비교해 차익의 18~24%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 중이나 기준은 상이하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 규모는 약 14조8000억원(109억달러)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다.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된 통화별 점유율에서는 원화가 미국 달러, 일본 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업계 반발… 조세 형평성 지적도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최초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매도 시

점의 차익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거래 경로 포착이 어려운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거치는 경우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투자자가 직접 취득가액과 손익을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가상자산 조세가 시행되면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현행안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에서 30%의 거래대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손실액의 이월 공제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쟁점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매매 시 손실액의 이월 공제를 하

용한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해의 이득에서 손실액 만큼 추가 공제한다. 가상자산의 장기 보유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손실액을 이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연간 이익과의 상계를 위해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면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선호하게 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가상자산과 함께 과세가 논의됐던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4년 12월부로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수출 절반 차지한 반도체… 물가·금리 변수 부상

월간 반도체 수출 600억달러 돌파
소득·소비 늘고 내구재 가격 상승

수출의 절반에 육박한 반도체 호황이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도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속에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수출 호황이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와 국내 가격을 자극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산업통상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간 600억달러를 넘었다. 전체 수출 1209억4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 달했다.

호황의 물가 파급은 한은의 진단에서 확인된다. 이치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향점검회의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등 내구재 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개선과 내수 회복은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이미 반영됐다. 한은은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신 총재는 당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근원물가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되고 오래 지속될



반도체 산업 호황이 물가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전망했다.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도 두 해 모두 2.5%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 확대가 소득 증가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측 물가 압력도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8%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다만 한은은 전월의 통신요금 관련 일시적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에서도 AI 투자는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원유·정제유 가격을 높은 지정학적 상황과 AI 관련 투자 급증이 물가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참석자는 AI 인프라 확충으로 중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지적했다.

AI의 생산성·공급 능력 개선 효과와 긴축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연준 참석자들은 향후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면서도 효과의 규모와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난 8일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서도, 인상이 반드시 연속된 회의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진단을 종합하면 한은의 추가 긴축 판단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가격·소득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해진다.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는지와 수출 호조로 개선된 소득 여건이 소비 회복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간담회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흐름을 설명하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DB손보, 2030년 배당성향 50% ‘승부수’

‘계약유지·자본 여력관리’ 성패 전망

DB손해보험의 배당 확대 계획은 계약유지와 자본 여력 관리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30년 별도 배당성향 50% 목표를 제시했지만, 계획 발표 전 상반기 유실은 화차별로 엇갈렸다. 배당가능이익 증가에도 할인율 변동이 영향을 미쳐 신계약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성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2030년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는 연결 40%·별도 50%이다. 현금배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목표는 지난해 실제 배당성향 30%보다 20%포인트(p) 높다.

DB손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별도 목표 차이는 해외 자회사 포테그라의 배당을 확보하는 시차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장기보험 25회차 유실율은 75.71%로 전년 동기보다 2.41%p 높아졌다. 반면 49회차는 52.72%로 7.35%p 낮아졌다. 공시된 7개 회차 중 5개가 개선됐지만 49·73회차는 하락해 화차별 흐름이 엇갈렸다. 화차별로 가입 시기가 다른 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8월 말 새 계획을 발표하기 전의 지표다.

DB손보는 공식 질의응답(Q&A)에서

적정 신계약 관리를 과도한 사업비와 고위험 담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에 가입하는 승환계약 등을 동반한 무리한 외형 성장을 자제하는 전략으로 설명했다. CSM과 자금수지, 배당가능이익이 함께 개선되는 성장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가입 후 유지서비스와 갱신 관리 강화도 실행 방안에 담겼다.

◆ 배당 재원 늘었지만, 추가 환원은 별도 조건

6월 말 별도 배당가능이익은 약 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다. DB손보는 지난 8월 13일 실적 설명회 Q&A에서 증가 배경으로 할인율 변동을 제시했다. 새 계획 발표 전에 확보된 배당 여력인 데다 금리 요인도 반영된 만큼, 이를 새 성장전략의 실행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월 말 K-ICS 지급여력비율은 204.37%였다. 내부 안전선으로 제시한 180%를 웃도는 수준이다. 배당 여력의 내부 안전선은 DCR 200%로 정했다.

2030년 배당성향 목표와 별개로 추가 주주환원은 K-ICS 220%와 DCR 400%를 모두 초과할 때 검토한다. 반대로 K-ICS가 150% 미만이거나 DCR이 100% 미만이면 주주환원 수준 조정을 검토한다. 6월 말 K-ICS는 내부 안전선을 웃돌지만, 추가 환원 검토 기준에는 못 미친 수준이다.

/김주형 기자